

□ 축산식품의 경제적 가치와 수급전망 □

따라서 저명인사들이 돼지고기와 닭고기 요리를 잘먹고 또 이것이 매스매체를 통하여 전파된다면 매우 효과적이겠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저명인사 아니라도 각 지역사회에서 지도급인사 예를들면 주부클럽회원 어머니회 회원들을 동원하여도 효과적인 것입니다.

이러한 홍보 캠페인 계획은 그냥 탁상에서 몇몇 사람 머리를 짜내서 나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앞서 잠깐 언급하였지만 면밀한 기초 조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소비자 태도 동기 등을 파헤치는 정성조사와 소비자태도, 의견, 식생활습관 등을 양적으로 파악하는 정량조사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조사결과 앞서 말씀드린 마스터 홍보 플랜이 작성되어 질 것입니다.

이러한 홍보 캠페인은 연간 적어도 2억 5천

만대지 3억의 금액이 투입되어야 최소한의 “임팩트”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이러한 홍보 “캠페인”은 문식장려와 같이 정부가 할 것이 아니라 축산단체 연합회 같은 기관에서 주관하고 다른 관계 기관도 기금 조성에 참여하여야 할 것입니다.

년간 3억원정도의 홍보비를 투입하여 돼지고기와 닭고기의 소비가 100억원 정도 늘어나다면 이것은 양돈업자, 양계업자, 사료공급자 뿐만 아니라 국가경제에도 크게 이바지 하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조금 늦은 감이 있읍니다만, 이제부터는 모든 관계 기관이 힘을 모아서 돼지고기와 닭고기의 올바른 인식과 소비증진을 위한 홍보 “캠페인”을 전개하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畜產食品의 經濟的 價值와 需給展望

中央大學校 農科大學 教授

經濟學博士 金 成 勳

1. 가축식품의 경제적가치

일반적으로 식품의 수요는 그 가격, 소득의 크기와 분배상태, 대체식품의 가격, 기호와 식습관, 그리고 인구등의 요인에 의하여 결정된다. 그리하여 일국의 경제가 성장을 거듭하고 도시화와 공업화가 급속히 진행되면 이를 수요결정 요인에 있어서도 아울러 상당한 변화를 나타나게 되고, 그로인해 각 식품의 수요량과 수요 “패턴” 역시, 그에 상응 하는 변화를 보이게 된다.

그런데 축산식품은 이중에서도 가격과 소득의 변화에 가장 민감한 수요 반응을 나타내는 식품이라 할 수 있다.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국민의 소득이 높아지면 신선식료품과 단백질 식품에 대한 수요는 다른 식품(곡물 등 저위 보존식품)보다도 그 증가율이 훨씬 크기 때문에 이들을 흔히 “성장식품” 또는 “소득력식품”이라고도 부른다.

한편 일반적으로 소득수율이 낮고 쌀, 보리 등 곡물소비가 식생활 “패턴”의 핵심(주식)을 이루는 지역에 있어서 이들 성장식품의 수요

□ 축산식품의 경제적 가치와 수급전망 □

는 그 가격의 변화에 대하여 수요반응이 훨씬 더 민감하고 탄력적이다. 다시 말하면 쌀, 보리가 주식인 나라에 있어서 축산식품은 마치 사치재의 성질을 나타낸다.

뿐만 아니라 사치재적인 축산식품의 수요는 국민의 소득수준이 미화 500\$ 대를 넘어 설무렵부터는 국민식단에 있어 영양공급의 균형유지 의욕과 동물성 단백질 선호 경향에 의하여 급격히 그 수요가 증대된다. 더욱이 국민의 소득분배가 비교적 원만하고 도시화가 급히 진행될수록 축산식품의 수요 “렛쉬”현상은 더욱 그 “템포”를 빨리 하게 된다.

이때 축산식품에 대한 개별적인 수요는 다양해지는 것이 원칙이나 아직 전반적인 소득수준이 동물성식품 소비의 초기단계에 머물고 있을 때에는 우선 종래의 식생활 관습이 크게

작용하여 우리나라의 경우 맨먼저 쇠고기수요 “렛쉬”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식관습의 개조는 세뇌(brain wash) 과정과 주택 및 조리 환경의 개선을 전제할 때에만이 가능하며 그리고도 꾸준한 “세워(stomach wash)” 운동의 반복을 요하는 문제이다.

이렇듯 축산식품의 경제적 가치는 일반적으로 가격 및 소득의 변화율에 대한 수요의 변화율로써 표시할 수 있다. 다음의 〈표 1〉에서 보듯 축산식품의 수요는 다른 식품에 비하여 가격탄력성과 소득탄력성이 모두 높다. 바꾸어 말하면 가격의 변화(율)에 대하여 그 수요의 변화(율)이 크고, 또 소득이 증대할수록 수요의 증가율이 더 크다. 최근에 와서 축산식품의 수요증대가 문제시되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러한 특성때문이다.

표1. 주요식품 수요의가격 및 소득탄성치

주요식품	가격탄성치			소득탄성치		
	농·촌	도·시	전·국	농·천	도·시	전·국
쌀	-0.40	-0.45	-0.38	+0.10	+0.10	+0.10
보리	-0.20	-0.25	-0.31	-0.19	-0.33	-0.46
밀	-0.40	-0.50	-0.79	+0.20	+0.31	+0.23
채소류*	—	—	-0.10	+0.22	+0.69	+0.21
과실류*	—	—	-0.33	+0.45	+1.34	+0.10
축산물*	—	—	-0.91	—	—	+1.44
쇠고기	-1.80	-1.40	-0.81	+0.94	+1.55	—
우유	-2.00	-2.00	-5.03	+5.40	+5.80	+3.59
돼지고기	-1.00	-1.10	-0.07	+0.59	+0.55	—
닭고기	-1.00	-1.70	-0.67	+0.80	+0.95	+1.33
달걀	-0.50	-0.80	-0.77	+0.86	+1.10	+0.73
수산물	-0.50	-0.40	-0.93	+0.31	+0.72	+1.35

자료 : * 표의 수치는 국립농업경제연구소(성배영), 식량

경제문제 종합분석, 1975. 12

그외 수치는 김성훈과 김동민, Population and Food in

Korea, FAO, Rome, 1976. 12

□ 축산식품의 경제적 가치와 수급전망 □

그동안 우리나라는 경제발전(소득증대)이 급속히 진행되는 가운데 도시화/공업화가 급 "템포"로 이뤄지고 있어 이중에 축산식품에 대한 수요는 경제발전 속도를 앞질러 늘어났기 때문이다. 예컨대 일반국민의 소득수준이 10% 늘어났다면 축산물의 수요는 14.4% 가 늘어난 셈이 된다. 다른 한편 아직도 동물성 단백질식품의 초기소비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 가격의 변화에 대한 수요반응도 대단히 커서, 만일 축산물의 가격이 10%씩 올랐을 경우 수요는 9.1%나 줄어드는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표 1>의 각 탄성치는 위와 같은 경제적 변화율을 식품별로 표시하고 있다.

이상에서 우리는 모든 축산식품과 생선채소과실류 등 신선식료품의 수요정책에 있어서 가격 및 소득에 대한 배려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인식할 수 있었다.

2. 축산물(식품)의 소비 및 가격구조

우리나라 경제가 1960년대이후 3차 5개년 계획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과정에 국민의 1인당 소득이 500\$ 수준(1975년 531\$)을 넘어서면서 축산식품에 대한 수요가 급 "템포"로 증대하고 있음을 다음 <표 2>에 잘 나타나 있다. 즉 1960년(1인당 GNP미화 94\$)에

표2. 주요축산물(식품)의 연도별 소비추세

년도	국민소득 (인당GNP)	육류총소비량		1인당 육류소비량(g)			젖류類 1인당소비	
		총량(M/T)	1인당(g)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개)	우유(gr)
1960	US \$ 94	89,043	3,559	510	2,317	732	33	-
1965	114	97,600	3,439	961	1,969	509	30	304
1970	223	165,063	5,191	1,174	2,596	1,421	75	1,431
1971	252	170,361	5,250	1,217	2,491	1,542	76	1,851
1972	303	184,725	5,591	1,243	2,671	1,677	86	2,500
1973	363	186,846	5,634	1,368	2,689	1,577	76	3,200
1974	483	200,128	5,889	1,545	2,746	1,598	83	3,606
1975	531	232,842	6,370	1,990	2,800	1,580	82	4,580

자료 : 농협, 영양지도 "핸드북", 1976

대비한 1975년의 국내육류의 소비 총량은 89,043M/T 대 232,842 M/T (8,108M/T의 전출량 포함)으로써 약 2.6부 가 증가하였다. 이를 1인당 소비량으로 환산하여 볼 때 1960년에는 3,559g의 육류를 소비하였으나 15년 후인 1975년에는 그 2배에 가까운 6,370g을 소비한 셈이 된다. 품목별로 보면 쇠고기가 3.9배 늘어난 1,990g (1975

년), 돼지고기는 1.2배 증인 2,800g, 닭고기는 2.1배증인 1,580g, 계란은 2.5배증인 82개, 우유는 1965년에 비해 15배나 늘어난 4,580g 을 보여주어, 우유와 쇠고기의 소비가율이 가장 높았음을 알 수 있다. 다른 한편 상대적으로 돼지고기의 1인당 소비량은 별로 늘어나지 아니했으며 닭고기 역시 육류소비의 평균증가율에 미달하고 있다.

이와같은 현상에 대하여는 다시 뒷절에서 차세히 설명하겠지만 그동안 돼지 및 닭고기의 생산에 기상이 많았다는 이유와 다른 한면 쇠고기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였기 때문에 빚어진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1인당 육류소비량을 타국과 비교해 보면 <표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첫째, 그 수량에 있어 선진국은 차지하고라도 경제적으로 낮은 수준에 있는 국가들 보다도 1인당 육류 소비량이 낮다는 사실이다.

동물성단백질의 1인당 섭취량으로 볼 때 1974년대의 한국은 15.1g인 반면, 대만은 20.9g, 일본은 34.6g, 미국은 74.2g 이었으며, 총단백질 소비량 중의 동물성 단백질량의 비중도 우리나라의 경우 18.7%인데, 대하여 이상 각국은 각각 30.6%, 43.6%, 그리고 70.7%를 보여주고 있다.

둘째, 육류소비의 품목별 구성비에 있어서 사회관습 및 종교상의 이유로 쇠고기 보다 돼

지고기를 선호하고 국가(필립핀과 홍콩)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국가가 쇠고기의 선호성향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이다. 다만 이중 일본의 경우 쇠고기에 비하여 닭고기의 소비량(율)이 많은 것은 후술하는 가격조건의 큰 차이로 인한 쇠고기 소비억제 때문이다. 끝으로, 우리나라는 이상의 어느나라에 비하여서도 육류소비 총량에 있어서는 물론,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어느 품목에 있어서도 그 소비가 아직 저위수준에 있다는 사실이 중요한 문제점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축산물가격권활률 일별하면 1970년대에 들어 수요급증로 인해 전반적으로 근 3배나 껑충 뛰어 최근에 와서는 쇠고기 파동까지 겪고 있는 사정이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의 육류가격을 주요각국과 대비해 볼 때 <표 4, 표 5 참조> 항간에서 말하는 것처럼 반드시 염려할 수준이 아니라 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우리나라와 축산기반

표3. 주요각국의 1인당 육류소비량 비교 *

품명 국명	쇠고기(g)		돼지고기(g)		닭고기(g)		계	
	수량	비율	수량	비율	수량	비율	수량	한국대비
한국	1,990	31.2	2,800	44.0	1,580	24.8	6,370	100.0%
일본	3,307	17.4	9,033	47.6	6,641	35.0	18,981	3.0부
미국	49,390	44.7	29,600	26.8	31,480	28.5	110,470	17.3"
프랑스	26,670	41.4	21,710	33.4	16,430	25.2	65,110	10.2"
필리핀	2,790	21.3	8,190	52.3	2,160	16.4	13,140	2.1"
타이랜드	3,650	33.0	4,920	44.6	2,430	22.0	11,010	1.7%
이태리	19,270	44.1	12,480	28.5	11,950	27.4	43,700	6.9"
영국	16,320	36.9	17,410	39.3	10,510	23.8	44,240	7.0"
홍콩	8,240	19.0	32,050	74.0	2,970	6.8	43,280	6.8%

* 한국자료는 1975년 통계치이며 나머지 나라의 수치는 1972

년도 자료임(일본만 1973년도 자료임)

□ 축산식품의 경제적 가치와 수급전망 □

조건(예, 사료조달면 및 수요구조면)이 비슷한 일본에 비하면 쇠고기와 닭고기의 가격은 3분의 1에 불과하고 돼지고기 가격은 kg당 1,000 원이나 더 싼 형편이다. 전통적으로 축산이 농업의 기본이고 축산 및 사료자원의 풍부한 선진국에 비하여서도 대부분 우리나라의 육류가격이 낮은 수준에 있다는 사실은 그동안 우리나라의 축산업이 너무 원시적 소규모 가정경영수준에 머물러 있었고 소비수준 또한 대단히 낮은 상태에 있었기 때문이다. 바꾸어 말하면 축산의 공급과 소비수준을 한 차원 높인 수준으로 이끌어 갈 축산정책과 가격 정책이 강구되어야 할 때가 바야흐로 다가 온 것임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한편 이제까지 우리 정부는 육류소비가격에 대하여 이른바 「협정가격」이라는 최고가격 "셀링"제도로서 늘어나는 수요증대를 하방적인 억압을 한것에, 단지 물가안정정책의 일환으로서 가격구별의 역할에만 치중한 나머지 생산력은 둔화된 반면에 수요는 더욱 늘어나고 그리하여 가격파동을 빈번히 겪고 있는 실정이다.

무릇 일반국민의 기초식료품인 농축산물의 수급조절에 있어 직접적인 가격통제방법은 그 생산구조와 기반을 취약케 하고 밀도살과 부정육의 뒷거래를 촉진하는 외에는 소비자에게 별로 이득과 효과가 없음이 선진제국과 과거의 사례에 의해 널리 증명되고 있다.

표4. 주요축산물(식품)의 연도별 전국평균가격변동

품 목		1971	1972	1973	1974	1975(12월)	1976(4월)
생 우	350kg 송아지	129,400 40,500	154,000 59,400	170,000 69,500	180,000 60,100	217,700 55,100	324,700 77,900
생 돈	80kg	19,900	16,80	26,100	26,800	53,600	53,000
닭	2kg	507	525	578	698	1,010	1,410
달걀	개당	12.14	12.78	15.37	18.58	22.50	27.80
쇠고기	600g	530	608	658	789	968 (1,440원 서울)	1,330
돼지고기	600g	313	311	351	421	749 (838원 서울)	817 36.67
우유	시유180cc	18.75	20.00	20.14	26.30	32.74	

자료 : 농수산부 축산행정편람 및 한국통계월보, 1976

표5. 세계 주요 국가의 육류가격비교

(단위 kg당 원)

주요국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한국(1974未)	1,315(100)	717 (55)	412 (31)
일본(“ ”)	3,306(100)	1,777 (54)	1,293 (39)
미국(“ ”)	1,396(100)	989 (71)	475 (34)
프랑스(1973未)	1,456(100)	1,838 (127)	888 (61)
영국	1,267(100)	1,022 (81)	609 (48)
이태리(“ ”)	2,026(100)	1,766 (82)	1,118 (55)
호주(“ ”)	1,022(100)	1,675(164)	1,469(144)
덴마크(“ ”)	1,709(100)	1,666 (97)	969 (57)

더우기 공급량(생산량)의 만성적인 절대 부족에 의해서 야기된 축산물가격파동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죄고가격별로 고수한다는 것은 비록 단기적으로 물가안정의 교류가 적지 않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볼때는 국내축산 및 유통업의 몰락과 외국산고기의 도입을 항구적으로 의존케할 가능성마저 배제하기 때문이다.

상식에 비추어 보드라도 국민소득의 증대에 따라 축산물의 소비가 늘어나는 일방, 생산은 아직 소규모적인 전통적 방식을 벗어나지 못한채 사료값과 인건비는 계속 오르는데 축산식품의 최종소비자 가격만 억압할 수 없는 것이다. 사실 그것이 일시적으로 행정력에 의하여 가능하다 하더라도 그 결과는 무엇인가? 소비의 우선적인 증대와 축산물 공급의 만성적인 부정, 그리고 유통업의 비정상적인 가동밖에 남을 것이 없음은 명약관화 하다.

발전하는 경제 가운데서의 축산물 수급문제는 한 차원을 더 높여 축산물의 생산 및 유통비용을 과다하게 발생하는 요인을 먼저 제거하여 주는 일방, 건전한 소비풍토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분명히 말해둘 것은 국력이 증대되고 있는 나라의 국민은 정당한 수준의 축산물을 소비해야 마땅하듯이 정당한 수준의 축산물의 생산과 유통이 원활히 되도록 하는 차원을 높인 정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라는 점이다.

3. 畜產物(食品)의 生產 및 流通구조

경제발전에 따라 畜產物의 需要가 증대하면 必然的으로 그 生產은 大量化, 전문화 되어야 하며, 그 流通量 역시 大型化 遠距離化 광역화되고 流通速度도 더욱 빨라져야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畜產은 1960年代 들어서 팔복한 成長率을 나타내고 있진 하지만 生產 및 流通方式도 過去 대체로 상용 크게

벗어 나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韓國의 農產은 저렴하고 풍부한 미국 잉여농산물의 도입에 의하여 한때 飼料의 공급이 안정되었고 또 새로운 品種 및 사육기술을 계속 도입한 결과 1973-4年의 약조전(세계사료파동)을 가까스러히 극복하여 오늘날의 肉類 및 卵乳生產은 1960年的 2.6배에 달하기에 이르렀다. 이期間中 韓牛는 1,009千頭에서 1,547千頭로, 乳牛는 단 800頭에서 85,200頭로, 犊은 11,885千頭에서 20,700千頭로 늘어났다.

가축단위로 환산하여 각가축의 구성비에 있어서도 1963年的 소 76.5%, 돼지 16.9%, 犊 6.6%에서 1974年에는 소 72.5%, 돼지 17.5%, 犊 10.1%로써, 소의 상대적인 비중이 감소한 반면, 犊은 그 生產 비중이 크게 늘어 나고 있다. 이는 소비증가와 더불어 소나 돼지의 종식율보다는 그 도살지수가 높아졌기 때문이며 소비구조에 있어 돼지고기에 대신하여 犊고기의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것을 반영한다.

이와 아울러 生產구조는 60年代 초반에 비추어 볼때 점차 농가부업적 형태에서 專業 및 企業的 形態로 전환하고 있음을 볼 수 있으나, 아직도 그 狀態는 1975年 농가호당 사육두 수에 비추어 볼때 韩牛의 경우 1.21마리, 肉牛는 4.85頭, 乳牛는 9.08頭, 돼지 1.90頭, 犊 19.1首로써 기업화 단계에는 훨씬 미흡하며, 1975年현재 전업축산업으로 등록된 축산기업은 韩牛 첫소중심의 140여 기업(1975)에 불과하다.

그런데 축산업의 발달에 따라 그 기초라 할 수 있는 飼料의 需要量은 연평균 12% 이상씩 늘어 나고 있으며, 國內產으로 이를 모두 감당하지 못하고 외회를 消費하면서까지 年間 약 50여 萬噸의 농후사료(옥수수)를 도입하고 있다.

사람이 먹을 식량과의 경합관계와 그동안 국제가격의 양동이후 정부는 초식가축(韓牛와

乳牛 등)의 증식을 중요한 정책과제로 내세우게 되었다. 사료가격의 양동은 1971-76年の 5개년 사이에 配合飼料는 평균 3 배, 단미 사료는 품목에 따라 2 대지 4 배나 올랐다.

1970年代 초반의 세계식량파동이 있기까지 그동안 미국잉여농산물의 安價한 무진장의 도입에 의하여, 양계와 양돈업이 크게 성장할 수 있었던 소지가 만들어 진 것이다. 그러나 이제 세계적 식량이 무기화되고 있는 정세하에서 우리나라 畜産業의 방안은 점차 國內飼料 자원의 조달가능성과의 합수관계를 찾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축산물의 상품화율은 최근의 전문(기업) 생산화 경향과 수요증대를 반영하여 1961 년의 74.3%에서 1975년에는 90.3%로 증가하였다.

그리하여 1975년 현재 축산물의 생산액이 전체 농산물 가액중에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꼭 불 다음인 12.5%를 나타내고 있으며, 그리고 전체농산물 유통액중 축산물이 절유한 비율은 5.6%에 달하고 있다. 이는 앞 절에서 살펴봐 와 같이 저위소비(생산 및 유통) 수준에 있던 축산물의 위치가 바야흐로 대량생산→대량 소비→대량유통의 단계에의 진입의 필요성을 강력히 시사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같은 생산 및 유통상의 변화정조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축산물의 유통구조는 다원화 다단계의 유통경로와 상대적으로 높은 유통 “마진”(소 및 쇠고기의 경우는 21.6%, 돼지 및 돼지고기는 28.4%, 타파 및 고기는 26.7%)을 안고 갖가지 불공정거래와 비합리적인 유통과정을 노출하고 있다.

우선 정부가 개설 또는 허가한 각종 유통시설(산지가축시장, 각종 도축장, 도매시장 등)이 설비기준에 거의 미달한 뿐만 아니라, 각종 공과금과 조세가 과중한 편이고, 다른 한편 유통효율과 유통속도를 둔화 내지는 저해마저 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가운데 소의 경우 두당 최소 62,000여원~76,000원의 부당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밀도살—밀반출과 물먹이기가 성행하게 되고 소매단계에 있어서는 부정체량과 혼합판매, 가격조작의 행위가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서울의 경우 1 일 수요량 소 600두와 돼지 1,100두중 60~50%가 지육 도매시장을 경유하지 않고 암거래 되어 왔다. 물론 이중에는 전실한 업자에 의하여 지방도축장에서 합법적으로 도축한 연후에 반입된 지육이 대부분일 것으로 믿는다 하더라도, 그 수송수단과 방법 지방도축시설의 현황, 저장 보관시설 등의 불비등을 고려할 때 지금 서울시민은 알게 모르게 부정처리되었거나 비위생적으로 다루어진 육류를 얼마전 식용에 공해야만 한다.

밀도살—밀반입의 “루트”는 산지의 가축시장단계에서부터 지육의 도, 소매단계에 이르기까지 과세되는 각종 세금과 공과금액만큼의 이익과 “프리스” 중간상인의 수수료와 “마진”만큼의 이익을 가로챈 셈이 된다.

바꾸어 말하면 정당 “루트”的 유통업자와 소비자는 예를 들어 소 한마리 가격의 15~20%에 해당하는 각종 공과금과 수수료를 부담해온 셈이 된다. 유통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소지에 대하여는 외면하고 소매단계의 가격만 끌어 둬려는 물가당국의 단결은 축산물의 유통구조를 더욱 혼란에 빠지게 하고 있음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4. 축산물(식품)의 수급전망과 제언

우리나라의 경제는 4 차 5개년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1981년대에 이르면 1 인당 GNP가 미화 1,200불수준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소득탄력적인 축산물의 소비수요는 누가 뭐라하던 더욱 증대될 것이 명약관화하다.

어떤 이들은 식량의 주곡인 일반양곡도 부족한 형편에 어떻게 축산발전을 무작정 끌고 나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하여 성급한 회의부

터 제기한다. 심지어는 유통과 축산물 소비대신에 곡물소비 위주의 식량 정책을 끌고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논자도 있다. 그러나 엄연한 현실은 지금과 그리고 앞으로 생활수준이 높아진만큼 그에 상응하는 식단의 다채로운 영양배치와 높은 영양가음식, 특히 동물성 단백질식품의 보다 많은 소비를 요구하고 있다. 그것은 인간욕망과 인간성장 및 생활의 당연한 논리적 소결로 받아들여야 할 문제이다. 이러한 논리를 궁정하든, 안하든 국민체 위향상과 보건의 유지를 위해 필요할 만큼의 동물성 단백질식품이 계속 공급되어야 할 추세는 경제발전과 더불어 더욱 진박해 질 뿐이다.

문제는 증대되는 건전한 수준의 축산물수요가 얼마쯤 될 것인가 우리 축산업의 현황은 이를 얼마쯤 어떻게 뒷받침할 수 있으며 그러기 위하여서는 어떠한 정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나에 달려 있다. 다시 말하면 장차 국민소득의 증가와 더불어 축산물수요의 증대를

필지의 사실로 인식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방법과 수단을 찾아야 할 때인 것이다.

정부(농수산부)는 제4차 계획이 끝나는 1981년도에는 유통소비가 1인당 9kg 수준인 총 347.9千M/T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였으며, 계란은 1인당 113개, 즉 전체국민 소요량은 4,400백만개, 그리고 우유는 1인당 13kg 수준인 전체 504.7千M/T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는 1976년도 실제치에 비하여 5년후에는 육란, 계란, 우유가 각각 1인당 34.3%, 32.9% 그리고 154.9%씩 더 늘어날 것이라는 가정과 같다. 인구증가율을 감안한 각 축산물의 전체 국민소요량은 각각 43.7%, 43.6%, 그리고 178.7%가 더 증가할 것임을 뜻한다.

만약 수요결정변수들에 있어 과거 15개년 (1959~73) 간의 변동추세가 계속 된다는 가정을 세워 축산물의 장기수요를 예측한 바에 의하면 <표 6>에서 보는바와 같이 '우유소비량을 제외하고는 농수산부의 추정치와 거의 비슷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표 6> 농산물(식품)의 장기수요전망 : 과거 15개년(59~73) 추세치

(단위 : 천M/T)

구 분	1974☆	1978	1979	1980	1981☆☆	1986
우 육	51.5	65.2	69.5	74.2	79.1	108.5
돈 육	95.4	106.5	110.7	115.0	119.0	142.3
돈금육	54.5	83.0	90.4	98.5	107.5	161.2
우 유	131.8	184.5	216.3	253.1	295.9 (504.7)	625.4
계 란	154.6	235.8	258.3	282.5	308.6	474.3
계		675.0	745.2	823.3	910.1	1,511.7

☆ 1974년의 숫자는 실증치이며 1981년 팔호안의 숫자는 정부 추정치임.

☆☆ 정부는 1981년의 유통수요량을 347.9千M/T로 추정, 달걀은 4,400백만개.

자료 : 농업경제연구보 제73호, 성배영 1975. 12.

이와같은 차이는 아마 정부는 초식동물인 우유와 한우종식에 시책의 중점을 두어 수급전망을 세웠기 때문인 것같다.

전문한 바에 의하면 정부는 축산진흥을 위한 생산시책에 있어서 초식가축중심의 중식과 사료의 자급화, 협업생산체제의 강화 및 생산의 안정화에 역점을 두어 종대되는 수급전망에 맞추어 물량증산을 추진해 나갈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러나 이와 비슷한 물량증대계획이 과거에도 없었던 바는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다시 3,000여 M/T의 쇠고기를 도입하게 한 근본적인 원인에 대하여는 예산부족 및 관계당국간의 협조부족으로 인해 아직 크게 손질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안타까운 일이다.

축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이 현실과 장래에 있어 피할 수 없는 정부당국의 당면 과제라고 할때 근본적으로 이를 해결하는 길은 축산당국의 소득보장과 유통과정의 전전한 발달을 강구하여 주는데 있음은 새삼 다시 강조할 필요가 없다. 정부가 쌀, 보리등 주곡의 자급을 달성하기까지 경종농업의 기반조성과 유통합리화를 위해 투하했던 투융자, 가격보조, 기술지도, 조세감면 및 행정지원 등의 노력의 10분지 1만큼만 축산업의 기반조성과 축산물의 유통합리화에 경주한다면 그 결과는 불을 보듯 환하고 명랑할 것이다.

고식적인 축산물가격 억제와 외육의 도입정책은 마치 1960년대이전의 주곡농업에 대한 그당시 정부의 국가억제와 외곡도입정책을 방

불케 할 뿐이다.

상위 중진국을 지향하는 우리 경제는 이제 적극적으로 축산업 개발을 밀고 나가야 할 때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1) 과감한 산지개발과 초자원조성 및 사료자급화 대책에 정부의 직접적인 투자가 실행되어야겠고,

(2) 농가부업적인 축산경영의 저변을 더욱 확충하는 일방, 중소단위협업 목축업과 대단위 기업목장에 대한 기반시설지원과 각종 “인센티브”를 강화해야겠으며,

(3) 사료자급농가 또는 비교적 고가가 먹히는 국산사료의 생산에 대하여 가격보조 지원 등을 서둘러야겠으며,

(4) 가축 및 축산물의 유통에 따른 각종 조세 및 공과금과 수수료 등 제반 유통상의 경비를 절감하기 위한 조치를 조속히 단행할 것이며,

(5) 소매단계의 협정가격에 의한 최고 가격 “실링”제를 철폐하는 대신 유통비용의 절감조치를 보강할 것이며,

(6) 우육, 우유, 돈육, 계란, “브로일러”등 축산물의 주기적인 가격(price cycle) 폭락으로 인한 축산업의 도산을 사전에 대비 방지할 수 있는 최저 가격제도 및 유통명령(Marketing order) 제도를 연구, 채택할 것이며,

(7) 끝으로 축산물소비에 있어 특정품목 편중의 기호를 조정할 충분한 국민식생활계몽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본다.

